

[인터뷰] 홍종원 대전시의원 "1인가구 특성 파악해서 접근해야"

안유리나기자 | 승인 2020.04.06 14:36



"1인가구 증가는 최근 몇 십 년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일 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홍종원 대전광역시의원에 말이다.

1인가구가 늘어나자 홍 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9일 '대전광역시 1인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해 시행토록 했다. 조례는 1인가구 비율의 증가에 따른 시대적 변화의 흐름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의 선제적인 마련과 대응을 위함이라는게 홍 의원 측 주장이다.

홍종원 의원은 1코노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1인가구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발생의 소지를 최소화 하고 1인가구의 생활 편의 및 심리적 안정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들에게 요구되는 주거문제, 경제적 빈곤, 사회적 고립의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각종의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조례제정을 발의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8년 기준 전체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31.5%를 차지한다. 이는 대전의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중 가장 많은 수이며, 전국 특·광역시 1인 가구 비율 중 제일 높은 수치다.

홍 의원은 "1인 가구(비율)의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이미 세계 여러 대도시가 직면한 현실"이라며 "최근 몇 십 년간의 주목할 만한 변화 일뿐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라는 점에서 인구, 사회, 경제학적 변화에 대비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각종 문화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소비패턴의 변화 등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급속한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결부되면서, 고령 1인가구의 증가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게 홍 의원 측 설명이다.

그는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및 각종 복지서비스의 변화 등 사회 복지시스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고 정책수립에 주안점을 뒀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가구의 특징 중 하나인 대도시와 지방의 차이점에 대해 짚었다.

홍 의원은 "대도시 1인 가구의 경우 직장·학업 등을 이유로 한 일시적 분거형태의 임시 가구에서 만혼의 독신가구, 이혼 등의 단독가구 중심이며 지방 1인가구의 경우 노인 단독 1인 가구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대도시에 비해 경제적 복지 혜택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생활환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과 대책 마련을 통해 1인 가구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사회적 관계망 강화 등 1인 가구 지원과 이를 통한 공동체 강화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이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인 가구의 특징 중 하나인 비자발적인 1인 가구에 대해 관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혼, 기러기 가족 등 이른바 가족 해체로 형성된 30대 후반과 40대 중심의 불안한 독신자 그룹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활안전성 제고를 위한 지원과 함께 지역복지 서비스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정책지원도 추진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일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유리나 기자